



독자의 편지

장성택 실각 계기로 구체적인 통일 시나리오 마련해야

나는 요즘 좀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2년 전 소설 《식량전쟁》을 통해 북한 장성택의 실각을 예측했었는데, 그대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책에서 나는 2020년 북한이 붕괴하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면 서, 대한민국이 세계 초(超) 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그렸다. 내 예상대로라면 이제 통일을 준비할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셈이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데 말이다.

통일이 되면 당장 필요한 것이 먹고사는 일이다.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주민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2012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출판한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에 의하면 통일이 되는 해에 170만~250만의 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최소한 120만의

통일미를 항시 비축해 두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예산은 48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3년 외교통일예산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에게 식량을 무상(無償)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국내 저(低)소득층에게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저소득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月) 10kg씩의 쌀을 무상지원하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영세민의 식량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는 기초적인 복지정책을 통일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추가예산은 81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3년 복지예산의 0.8%에 불과하다.

통일은 저절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탈북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 이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통일이 되면 한국의 거대 자본들이 북으로 들어가 북한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북한 동포들이 함께 살고 싶어하는 통일 시나리오가 마련되어야 한다.

식량문제 이외에도 국유화(國有化)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와 부동산을 북한주민에게 배분하는 원칙이나, 한국의 자본이 북한에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들이 미리 만들어져야 한다.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분야에서 북한을 한국으로 유인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전개해야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의 장성택 실각(失脚) 사태를 계기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와 전략을 재(再)점검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통일 시나리오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